

##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

**1398**  
일 · 상 · 고 · 발
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국민콜 110  
정부민원안내



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  
국민권익위원회(보호보상과)  
TEL. (044)200-7748, 7740 FAX. (044)200-7947

##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

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



### 부패신고 이전단계

- 신고내용의 온라인(직장게시판 및 SNS 등) 게재 등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.  
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, SNS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.
- 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.  
직장내 전화 · 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며,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 사실 등을 언급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### 부패신고 이후 단계

#### 신분이 밝혀지기 전

-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 
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,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.  
소속기관 · 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.

-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.

검찰 ·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
#### 신분이 밝혀진 후

- 소속기관 · 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.

항시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 조치를 주시하여야 하며, 그것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, 필요시 위원회 보호조사관과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.

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####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

-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위원회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에 보호상담 후 보호요청을 하고,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


##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



유기있는 경우, 부패신고가  
청정문화건설의 토대를 만든다

2017. 4월 부터 사립학교 부패신고자도  
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
## 부패신고 보상금

- 신고보상금을 **최대 30억 원**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.
-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.

| 보상대상가액          | 지급기준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억원 이하          | 보상대상가액의 30%          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 | 3천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20%    |
|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| 1억 1천만원+5억원 초과금액의 14% |
|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| 3억 2천만원+20억원 초과금액의 8% |
| 40억원 초과         | 4억 8천만원+40억원 초과금액의 4% |

※ 보상대상가액

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

## 부패신고 포상금

- 신고포상금을 **최대 2억 원**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.
-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.



부패신고자는 **신분보장**, **비밀보장**, **신변보호**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
## 신분보장

**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!!**

-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.
-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



당하였거나 / 당할 우려



- ✓ 원상회복·전직·징계보류 등 적절한 조치
- ✓ 원상회복·효력 유지 등 적절한 조치



## 비밀보장

**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!!**

-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. ('18. 2. 1 시행)
-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하면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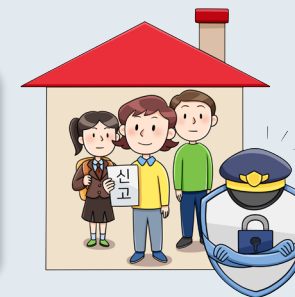


## 신변보호

-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신변보호의 종류

-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
- 일정 기간 신변 경호
- 출석·귀가 시 동행
-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
-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



경찰청장, 관할 지방경찰청장, 관할 경찰서장

## 책임감면

-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또는 형을 감경·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


위반자는 이렇게 처벌됩니다!!

- ✓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('18. 2. 1 시행)
- ✓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✓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